

'16년 표류' 광주 어등산개발재협상 난항

재협상 시한 종료...보증금 '20억 vs 480억' 입장차

"시가 확대 해석 vs 공익적 가치" 유권해석 불가피

"사업 정상화냐 새 사업자 선정이냐" 결정시점 임박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으로 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사이의 극명한 의견차이로 결국 재협상 시한 내 타결에 실패했다.

담보금 성격의 사업이행보증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재협상 시한인 전날 오후 최종 논의테이블에 앉았으나 최대 쟁점인 사업이행 보증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협상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총사업비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협약 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지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진건설 측은 총사업비 산정은 민

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애초 광주시 공모지침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 원의 10%인 20억 원만 이행보증금으로 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관광시설 완공까지 총사업비가 4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10%인 48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뒀다"는 광주시와 "시가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서진건설 측 주장도 또 다시 충돌했다.

결국 480억 원과 20억 원 사이에서 갭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마무리됐고, 재협상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정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보증금 규모 등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재협상 시한은 지난 협상 최종 결렬은 아니다"며 "총사업비와 보증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큰 만큼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한 연장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협상 연장 등을 통해 협의가 원만하게 풀릴 경우 사업은 뒤늦게나마 정상화될 수 있지만 최종 결렬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공모가 불가피해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둬해 왔다.

수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지난 해말 서진건설 측이 일부 승소한 뒤 시의 항소포기로 1월부터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평행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 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만 16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검찰, 송달료 횡령 전 광주지법 직원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3년 넘게 법원 송달 수수료 수천 만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법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102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 위장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법 실무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파면된 A씨는 "잘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 1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 사무 시스템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무 불이행자 관련 사건의 특별(집행관) 송달 명령이 떨어진 것을 일반(우편) 송달로 바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남기고, 다른 사건 신청·관계인들이 특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처럼 공문서 전자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어난 환급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이 사건과 관련,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광주지법에 알렸고 이후 법원 자체 조사와 수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3년 넘게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초 1명이 송달 관련 전산 입력과 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려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기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이 사안을 처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흘째 실종' 치매노인...경찰다각적수사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80대 치매 노인의 행방을 나흘째 찾고 있는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자택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간 A(80)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하루종일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예상 이동경로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나흘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A씨와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행방을 거듭 추궁하고 있으나, B씨는 '만날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색을 병행하면서 범죄 연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음란물 수백개 산20대... "여친 없어서" 황당 변명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남 진흥진 대학생 A(27)씨의 아동성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SNS인 트위터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4만5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로부터 저장소 사이트 아이디를 넘겨받은 뒤 3차례에 걸쳐 영상 243개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 잘못된 성욕에 이끌려 아동성소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며 "봉사활동도 23시간이나 했다"고 참작을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광주 산정지구 투기의혹으로 원주민 피해...지정 철회"

대책위 "농사 준비도 보상 받기 위한 행위로 따가운 농총"

"토지구획공사·광주시청 앞에서 지정 철회 요구 집단행동"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투기성 거레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정부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정지구 80여개의 입주업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산정지구 주민 대

책위원회'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원주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들은 개발 계획과 상관없이 조상대로 물려받은 산정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투기의혹으로 인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땅을 개간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농총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정지구에는 하남공단에 입주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토지거래까지 금지돼 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빈집에 세들어 사는 주민들은 집주인의 비위 달라는 요구에 갈곳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각종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택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는 현실화 될 것이다"며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음주께 부터 광주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앞에서 '정부의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